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4. 2. 7.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4년 2월 7일(수) 14:00~18:14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217호(2023년)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4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4년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8호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국민연금기금의 내부통제기준에 국민연금 임직원의 개인적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그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한 처리 규정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보고자) 국민연금 준법지원실 운용지원 팀장임. 내부통제규

정상 개인거래부분 중 전체적인 기밀정보 이용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수탁채책임활동과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함. 이에 따라, 수탁자책임활동과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위반에 대한 근거들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음.

- (위원) 개인적인 이용은 어떻게 적발이 가능한 것인지?
 - (보고자) 매년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의 개인 주식거래계좌를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하여, 매매내역을 증권사로부터 받아다 검증하고 있음. 주요운용과 관련된 이용 등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고 기금운용정보들이 개인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련 임직원 개인의 주식거래는 금지하고 있음.
- (위원장) 오늘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재정과장님과 국민연금에서 참석하셨는데 정보교류차단장치는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매년 이맘때 즈음에 항상 확인을 하시는 것 같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임. 복지부도 규정에 따라 매년 나가서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음. 매년 점검에 따른 어려움·번거로움이 있기는하나,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니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정기점검, 집중점검 등을 열심히 하고 있음.
- (위원장) 제18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안건 제20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첫 번째, 금융투자업 제외와 관련해서는 ‘외국 금융회사(RFI) 간 외환 파생거래는 금융투자업에서 제외’인데 당사는 외국 금융회사 간 거래이지만 이것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것인지?

- (보고자) 맞음.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라고 저희가 볼 여지가 많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시행을 위해서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 외국계기업 임직원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의매매한 형태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스톡옵션이나 성과보상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해외 본사에서 스톡옵션 등으로 국내에 있는 직원들한테 성과보상 형태로 주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해외 본사에서 성과 차원에서 주식을 받으면 해외증권사의 계좌(account)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해외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추가매입을 할 수도 있지 않은지?
- (보고자) 그것은 기본적으로 매수니까, 저희가 지금 규정하는 것은 이미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주는 것임. 매수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이 됨.
- (위원) 그것이 발견(detect)이 안 될 것 같음.
- (위원) 그와 같이 기관투자자가 아닌 직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아마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견(detect)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음.
- (위원) 결국은 가지고 들어 올 때 발견 될 수 있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장) 당연히 이런 규제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환과생상품 거래라는 것이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에
교차로 규제를 받는 영역임. 다른 규제개선이 필요한 부분
이 있는지는 잘 점검(check)해 주셨으면 좋겠음.

- (보고자) 알겠음. 기재부 외화제도과와 저희가 상시로 협의하
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1호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OOOOOOO에 대해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대한 어
떤 조치가 있었는지?

- (보고자) 그러함. 인지를 하고 그 당시 소관 검사부서 쪽에
무인가 중개영업 행위로 통보를 하였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제재절차나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 (위원) PEF GP이기 때문에 관할하는 금투검사2국 쪽에 조
치를 의뢰했다는 말씀이신지?

- (보고자) 맞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고발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챙겨보고 그런 부분들이 이행될 수 있게 확인하도록 하겠음.

- (위원) 이것이 제척기간이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될 안건인 것 같기는 한데, OOOOOO의 행위가 무인가 투자중개업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제재가 나가는 것 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본 위반행위에 대해 아직 의미 있는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그것을 전제로 제재를 하는 입장이어서 나중에 고발을 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안 되면 저희는 직권재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 (보고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는 사안이기는 함. 그런데 저희가 검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했음. 판례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업(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매매는 일회성이지만 양태나 의도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관련 내부자 녹취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검사반 판단으로는 이것은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 (위원) OOOOOO이 이 행위 외에 또 다른 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녹취록 외에 실제로 이쪽이 이런 형태로 계속 거래를 했다는 것이 추가로 더 확인된 것이 있는지?

- (보고자) 매매양태로 이 거래를 확인한 것은 1건을 확인했음. 다만, 한국투자증권(주) 직원 내부녹취를 통해서 사모거래 중 개나 그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매매양태가 여러 번이지 않아도 반복·계속할 의도가 확인되면 업(業)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음.
- (위원) 매수했다가 매도를 하는 것이 없는 경우는 아닌데 이 것이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고 매수거래가 있기 전에 사전협의가 다 되어서 자기계산에 따르는 위험인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개로 보셨다는 말씀인지?
- (보고자) 그러함. 그 근거로는 사전에 매수거래 상대방과 매도거래 상대방이 전부 다 특징이 되어 있었음.
- (위원) 사전에 거래상대방이 서로 매수자, 매도자 거래의 거래조건 등이 협의되었고, 이들이 중개행위를 한다는 것을 한국투자증권(주)이 거래과정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보고자) 내부직원 녹취에서 확인을 했음. 한국투자증권(주)의 업무관련 담당자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녹취로 확인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한국투자증권(주) 내부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음.
- (위원) 업(業)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속성·반복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

- (보고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성·반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렇지만 그 매매건수가 1회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영업의 의사나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 경우까지 고려를 해서 지속성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알고 있음.
- (위원)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주) 직원의 확인되지 않은 언급만 있을 뿐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업(業)으로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 (보고자) 이번에 OOOOOOO이 했던 블록딜 거래를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우연히 발생한 일은 아니고 사실상 매수자, 매도자, 매매거래조건 등을 모두 세팅(setting)한 다음에 수수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무위험으로 투자중개를 한 것이어서 이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봤을 때 단순히 우연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도 이 OOOOOOO은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할 생각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음.
- (보고자) 한국투자증권(주)을 통해서 매매한 부분들만 확인한 것이고, 이것이 검사2국 쪽에서 OOOOOOO에 대한 무인가 부분을 확인하면 다수의 중개거래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위원장) PEF GP라면 PEF로서 일반적인 투자행위를 하고 매매행위를 하는데, 지금 투자나 자기계산상의 매매투자나 중개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인데, 흔히 말해서 거래상대방

이 특정됐고 그렇게 단기간에 하는 것으로도 중개가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이것이 제척기간이 급해서 먼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증선위 위원님들의 의문을 검사2국과 함께 보셔서 다음 증선위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혹시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것은 어려운 일정으로 알고 있음.

○ (위원장)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중개냐 아니면 정말 자기계산상의 투자매매냐, 이 부분을 녹취록만 가지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지?

- (보고자) 이것이 O월OO일까지 제척기간이어서 시간이 촉박한 것은 맞음.

○ (위원) 아까 이 거래가 PEF GP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금이 PEF 펀드의 자금인지, GP 고유의 자금인지?

- (보고자) 이 블록딜 거래에 있어서는 증거금 면제를 승인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OOOOOOO의 자금이 거래과정에서 투입된 바 없음.

○ (위원) 무위험으로 거래를 한 중개수익이라고 보신, 그것이 어디로 귀속이 되는지? 고유로 귀속인지, 펀드로 귀속이 되는지?

- (보고자) 고유로 귀속이 됨.

- (위원장) 만약 펀드에 수수료 수익을 귀속시켰다면 어떻게 보면 펀드 GP로서 정상적인 매매로 볼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거래상대방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PEF GP라면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보고자) 매도거래와 매수거래 상대방을 전부 다 특정을 시켜서, 그 거래를 동시에 집행을 하면서 사실상 거의 시차 없이 매도·매수거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GP는 사익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사실상 위험 없이 수취를 한 결과가 초래됐음. 겉으로 드러난 거래양태, 실질적으로 양방향 거래에 대한 부담을 해당 업체가 부담하지 않았다는 부분들로, 경제적인 실질이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PEF GP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당사자 A, B, C가 있는데 B가 A와 C의 거래를 지금 형태로 중개를 했음. 자기 돈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특정된 상황에서 중개했다면 B는 일반적으로 중개업을 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무인가 행위로 해서 고발대상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단순히 양방향 거래를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 중개거래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다른 요소까지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음.
- (보고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무인가업에 대한 판단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추단해서 결정내리기보다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음. 그리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단 건으로 조치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내심의 의사가 반복적으로 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추단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만약 나중에 이 건을 무인가영업으로 해서 고발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이 될지 의문은 있음.

- (참여자) 저도 처음 안건 봤을 때 두 가지가 의문이 들었음.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무인가 중개업에 해당할 것인지는 여부인데, 판례에 이렇게 적시한 것은 한 번 걸렸더라도 반복되는 의사와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개업하자마자 걸린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이것은 불법 무인가 중개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닌데 이번에 걸린 것이 이 내용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에 있는 내용, 자기 들끼리의 대화만으로는 사실 애매하기는 함. 한 번이 아니라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고 하면 추단하기가 쉬운데 이것 하나만으로 했을 때는, 이 의미에 대해 다양한 방어해석이 가능한 것임. 그리고 구성요건 자체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목적과 수단 관계를 요구하고 있음. 여기에서의 위법한 거래는 무인가 매매중개업인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부정한 수단으로 증거금을 면제해 줬다는 관계가 되는 것인데, 목적, 수단 관계에 이르는 구성요건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했음.

- (보고자) OOOOOO의 의도와 관련해서 행위자의 경위서를 받아봤을 때 그 행위자는 이 매매 관련해서 회사 측에 구성하는 내용 모두를 OOOOOO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전달하는 것임. 그러면 그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OOOOOO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OOOOOO이 이런 업무를 이전에도 했었다고 추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부분임. 그래서 행위자와 OOOOOO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행위자가 무인가 중개업을 도와주게 된 경위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업(業)으로 할 의사가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파악하고 있음.

- (위원장) 이것은 검사 안건이니까 금융위까지 가야 의결이 되고 최종적인 제재가 부과되는 것인지? 제척기간 OO일이 라고 하였고, OO일에 금융위가 있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장) 어쨌든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증선위에서는 원안대로 하되, 안전검토소위 때 법률적인 무인가 투자중개업 여부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안전검토소위 때 당사자인 한국투자증권(주) 내지는 필요하다면 OOOOOO까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음. 그렇게 해서 안전검토소위 때 실체적인 것들을 조금 더 볼 수 있게 해서 안전검토소위의 결과에 따라서 금융위에 상정하는 것이 증선위 현 단계에서는 최선의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됨. 위원님들, 어떠신지?

- (위원) 동의함.

- (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셨던 여러 논점들을 정리하셔서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금융위 안전검토소

위에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음. 그런 것을 전제로 제21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2호 『코어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3호 『코너스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코너스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임. 모두진술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마지막 소명 기회에 사훈을 걸고 오직 사실만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조치원인사실 중 첫 번째, 투자중개업자의 요청에 따른 집합투자자산운용 금지위반의 건은 제재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후 당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음으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 소명하겠습니다. 본 투자는 ※※※※※※※※의 ▼▼시 ▼▼군 ▼▼▼▼▼▼▼▼▼▼▼▼ 개발 공모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의 주체인 (주)△△△△의 투자제안으로 당사와 ㉠㉠증권, 당사의 지분 13.19%를 소유한 2대 주주 ㉠㉠㉠이 지배하는

◆◆◆◆◆◆◆◆ 외에 총 11명의 공동투자자들이 투자집행 및 원리금 상환,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SPC인 (주)●●●●●●●●를 설립하고 컨소시엄 공모법인인 ○○○○○○○○○와 시행법인 ●●●●에 투자하였던 것임. 당시 법무법인 바른의 법률검토와 자문, 대출 및 투자약정서에 따라 공동투자자들이 ▼▼▼▼ 개발 공모법인과 시행법인에 투자하기 위해 SPC에 투자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2대 주주 ㉠㉠㉠이 지배하는 (주)◆◆◆◆◆◆◆◆의 SPC 지분이 32.35%로 30%를 초과하여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사후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임.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음. 다음으로 당사가 SPC의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대주주 ㉠㉠㉠이 어떠한 이익을 본 사실도 없고 당사가 추가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당사는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소명서에 담긴 자료와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당사와 SPC간의 자금거래내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셨을 것이라 여겨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SPC의 투자금이 실질차주인 ○○○○○○○○○와 ●●●●●●에 투자되지 않았거나 특수관계인이 공동의 투자자들과 다르게 차등하여 원리금 상환을 1원이라도 더 분배받았다고 지적하거나 주장하지는 않았음. 이것은 당사가 대주주 ㉠㉠㉠이나 SPC의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출된 자료에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임. 공동투자자들과 SPC는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행위들을 수행하였고, 실질차주인 ○○○○○○○○○가 대출금 사용 목적을 위반하자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하고 연대보

증사인 (주)△△△△로부터 원리금 대위변제를 받았음은 물론 위약벌까지 수취하였음. 이는 모든 공동투자자에게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고 대주주 ㉠㉠㉠에게 어떠한 특혜도 제공된 사실이 없음. 또한, 투자기간 내 모든 투자자금은 회계법인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었음. 즉, 투자구조에서 SPC는 실질차주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의 단순 도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뿐임. 당사에게 기관주의와 과징금 7억 8,800만 원을 부과한다면 지방 최초의 자산운용사로서 지방의 보다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평판 리스크와 재무적 부담을 피할 수가 없음. 향후 법과 제도 규칙을 준수하며 보다 더 신중한 판단으로 지속가능한 자산운용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니 앞서 말씀드린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어서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소명 드리겠습니다.

- ▶ (진술인) 이어서 법률대리인이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이 조항을 해석할 때 조치예정자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 본 건에서 가장 핵심적이자 유일한 법률적 쟁점은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등 신용공여금지 규제 적용에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형식적으로 대여한 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지만 해당 대여금의 실질적인 차주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그 신용공여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지라고 생각함.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본 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대주주와의 거래 등 제한의 입법 취지는 금융투자업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그로 인한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 전가되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최근 법원은 개인대출이 금지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형식적으로는 SPC법인에 대여를 하고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그룹 회장인 개인에게 들어간 사례에서 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대여한 자는 실질적 차주인 개인으로 본 바 있음. 나아가 금융감독원도 2020년초 본 건과 유사한 취지의 규제인 집합투자사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생한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는 규제에 있어서 위 규제에 따라 금지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열회사 대출채권 취득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을 제공받는 최종 차주가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한 바 있음. 이상과 같이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등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취지와 유사사례에서의 금융당국의 입장,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란 그 신용공여를 받는 최종 신용공여의 수혜자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이에 따라 본 건을 살펴보면 조치예정자의 1차적 거래상대방의 형식차주는 조치예정자의 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특수목적법인 (주)●●●●●●●●이지만 위 특수목적법인은 단지 금융투자업자 대주주를 포함한 여러 대주, 투자자들의 실질 최종 차주, 투자대상법인에 대한 대여금, 투자금의 통합 집금, 집행, 관리, 원리금 상환금 등의 수취, 분배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에 불과함. 즉, 조치예정자가 대여 및 상환우선주 취득방식에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투자에 따른 신용위험도와 투자수익성 등 판단의 객체가 되며, 투자 결정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실질적 최종 차주 발행인은 특수목적법인인 (주)●●●●●●●●가 아니라 위 특수목적법인을 단순히 도관으로 통과한 대여금과 상환우선주 인수대금을 수취하여 실제로 개발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대여와 상환우선주에 따른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과 ●●●●임. 본 건 대여 등 투자는 결국 이들의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대여금 등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고 실제로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본 건 대여의 최종적인 실질차주, 수혜자는 조치예정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독립된 제3자인 ○○○○○ 등임이 너무도 명백함. 본 건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대여 등 신용공여에 따라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아니면서 해당 대여금 등이 직·간접적으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전혀 흘러들어가지도 않고, 애초에 모든 투자거래당사자들의 일치된 의도가 실존하는 독립적인 제3자에게 신용공여되기 위한 것이었다면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으로 신용공여한 자는 오로지 최종적 신용공여의 대상 차주, 수혜자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본 건에 있어 조치예정자가 신용공여

를 한 대상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주)●●●●●●●●가 아닐 것임.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해당 규제의 본질적인 취지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투자구조, 궁극적인 실질 신용공여 수혜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1차 거래만을 따로 떼어내어 신용공여 대상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고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결론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본 건 조치예정내용 중 과징금 부분은 신용공여 대상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잘못 확정하여 적용한 것임으로 조치예정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주시기를 요청 드림. 한편, 가사 본 건 대여금 실질차주가 조치예정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조치예정자에게는 여러 가지 고려하여 주실 수 있는 정상 관계들이 있음. 첫째, 조치예정자는 규제를 의도적으로 위반할 목적으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SPC를 통하여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고 특별히 그러한 동기도 없었음. 이러한 투자구조에서 SPC는 단순한 도관이므로 그 주주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거래 사례에 따라 회계법인의 담당회계사나 설립업무를 맡는 법무사 개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조치예정자가 본 건 대여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로 SPC가 설립되는 구조로 투자를 진행하였을 것이며 이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님. 둘째, 본 건 대여 등 투자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별도로 본 건 규제 저촉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음. 이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조치예정자로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래구조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음. 셋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 대여금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를 단순 도관으로 하여 모두 제3자에게 대여/투자되어 (주)●●●●●●●●에게 어떠한 이익이 분여되는 등으로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전혀 되지 않았고 전체적인 투자구조상 (주)●●●●●●●●의 신용위험이 조치예정자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없어 본 건 규제가 방지하고자 하는 나쁜 결과나 규제 공백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음. 따라서 혹시 본 건 대여가 제재대상이라고 판단하시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약 8억원의 제재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인 조치예정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바, 조치예정자에게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위와 같은 점을 헤아려 살펴주시어 조치예정자에게 과징금 제재는 부과하지 말아주시기를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 (주)●●●●●●●●의 지분 비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너스톤자산운용(주), (주)◆◆◆◆◆◆◆◆, ▶▶▶을 포함한 기타 개인투자자들이 각자 약정된 지분대로 4억 2,500만 원을 보통주 투자를 한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리고 이 보통주 투자 들어온 4억 2,500만 원 하고 투자자들이 125억 7,500만 원을 SPC인 (주)●●●●●●●●에 대여를 했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러면 결국 125억 7,500만 원의 대여금과 4억 2,500만 원이 ○○○○○이나 ●●●● 등으로 투자가 된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런데 각자 다른 쪽은 보통주 투자를 지분대로 족했는데 보통주 투자 비율대로 투자금을 다 회수해서 안분을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 ★★★, ▶▶▶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 투자만 하고 125억 원 7,500만 원의 대여금을 조달하는 것에는 돈을 넣지 않았음.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런데 나중에 투자결과 회수된 금액에서는 보통주 비율로, 그러니까 회수된 금액에서 대출(loan)로 대어를 한 사람들은 원리금 빼고 나머지 사업성공 회수금에서는 그것을 안분비율을 한 것인지? 보통주대로,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대출금으로 투자되어서 발생하는 이익을 대출금 넣지 않은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향유한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는 점이 있지 않은지?

▶ (진술인)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거쳐서 투자자를 모았을

때 한 2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11명의 공동투자자들이 형성되어서 집행되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대출금을 (주)△△△△이 그때 당시에 도급순위 84위로서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에 대출금은 안전하다고 판단하신 분은 대출금까지 넣고 상환우선주를 받으신 것이고 이 대출금이 위험하고 작은 돈만 넣고 나중에 기대수익이 없거나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신 분은 지분만 참여하는 것으로 투자구조가 사전에 확정되었던 것임.

- (위원) 그러니까 4억 2,500만 원 보통주 투자, 125억 7,500만 원 대여해서 SPC를 통해서 투자가 됐음. 투자해서 들어온 금액이 대출원리금을 빼고 어떻게 보면 사업수익이 발생한 것이 174억 2,500만 원이 발생했음. 174억 2,500만 원이 발생하는 이 사업에 기여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보통주 들어간 것은 4억 2,500만 원 밖에 안 되고 대여로 들어가는 것이 125억 7,500만 원으로 보임.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것이 같이 사업에 기여가 되어서 사업수익이 발생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운용사나 큰 금액을 대출하는 쪽에 대출 기회가 없었다면 이 수익 발생한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음. 물론 대출이 선순위로 가져가게 하고 보통주 끼리는 어차피 다 동순위니까 보통주 전체는 후순위이지만 ▶▶▶씨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5%에 해당되는 2,125만 원을 넣고 특수관계인 쪽에서 대규모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대출에 따른 수익이 발생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는

데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씨가, 이분은 8억 7,100만 원을 배당 받은 것인지?

▶ (진술인)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임. 미래에 저희들이 시행사가 제시한 2,900억 원이 사업이 끝났을 때 나온다고 했고 저희들은 그중에 한 7%인 205억 원 정도가 사업이 끝났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었고 그 예상되는 수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투자할 당시에는 몰랐던 것임. 시행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이 상환우선주 자금은 그냥 없어지는 구조였고, 앞서 대여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주)△△△△이 연대보증을 서서 내가 투자한 상환우선주 대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대여에도 참여해서 원리금을 모두 변제 받았고, 지금 말씀하시는 8억 얼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이 끝나 잘 되었을 때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기대수익으로 그 시행사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각자 리스크를 판단하신 것임. 그런데 현재 그 사업이 잘되어 가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음. 우리가 원래 예정기간인 5년 동안 그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하고 이 사업시행자가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으니 지금으로 보서는,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투자원리금은 저희들이 대출구조로 해서 다 상환을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업이 잘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음.

○ (위원) 코너스톤자산운용(주)은 고유자금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펀드자금으로 넣은 것인지?

▶ (진술인) 고유자금으로 하였음.

- (위원) 고유자금으로 이렇게 SPC 지분을, 최대주주가 아니니까 다른 이슈(issue)는 없겠지만, 지금 문제의식이 출발한 것은 그것 같음. 만약 (주)●●●●●●●●에 보통주 출자 비율대로 대출(loan)도 이루어졌으면 그럴 텐데, 결국 (주)●●●●●●●●●●●●에 들어간 대출금이 상대적으로 거액인데, 사업계획에 대해 실제 분배 안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결국은 많은 금액을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물론 손실이 발생하면 보통주끼리는 순위가 똑같으니까 특별히 ▶▶▶씨가 후순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통주끼리는 다 동순위기 때문임. 그런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돈을, 그러니까 보통주만 낸 쪽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대출로 인해서 발생한 사업수익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더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지?

▶ (진술인)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였고 그때 당시 (주)△△△△의 기업신용등급이나 (주)△△△△의 상환능력을 믿으셨던 분들은 대여를 해서 내가 상환우선주에 투자할 자금까지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대여를 통해서, 그 금리구조와 상환구조를 보면 딱 그렇게 짜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분들은 대여와 같이 하셨고, 그것이 미답지 않아서 이 정도 규모(size)는 내가 감당하겠다, 혹시 사업이 잘못되어도 투자금 손실은 볼 수 있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그렇게 참여를 안 하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자와 같이 (주)△△△△의 신용상태나 1년 이내의 유동성 위기 등, 그때 당시 (주)△△△

△상황으로 봐서는 절대 올 수 없다는 믿음에 저희들도
고유자금을 넣어서 투자를 하게 된 것임.

- (위원) 이것이 (주)●●●●●●●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관계인데, (주)●●●●●●●를 수단(vehicle)으로 이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던 것인지?

▶ (진술인) 저희들이 처음에는 펀드로 이것을 계획했었음.
그런데 저희가 지방에서 설립하고 2년이 채 안 되다보니
까 첫 번째 판매사의 문턱이 너무 높았음. 그다음에 시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펀드로 추구하던 부분들이, 시행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 시일이 다가오면서 저희들이 펀드로
구성했던 것을 옳고 범무법인 \$\$의 자문을 구했음. 그래서
범무법인 \$\$의 법률검토와 자문, SPC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었고 범무법인 \$\$의 자문과 검토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동투자약정서라든지 대출약정서를 맺
고 진행하게 된 경위임.

- (위원) 저도 질문 몇 가지 드리겠는데, 그 SPC가 대출 없이
상환우선주만 인수할 수 있었는지?

▶ (진술인) 그렇지는 않음.

- (위원) 대출이 상환우선주 인수를 위한 전제조건이었는지?

▶ (진술인) 맞음. (주)△△△△ 측의 투자제안 전제조건이 그것
이었음.

○ (위원) 만약 SPC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투자자들은 지분율만큼 동일한 비율로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 (진술인) 저희가 그래도 대구지역에서는 신뢰를 얻고 있는 금융사로서 각자 투자는 하지 않았을 것임.

○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SPC가 없었다면 결국 상환우선주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분율만큼 동일한 비율로 대출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런데 SPC가 설립되어서 대출금의 비율 부담이 달라진 것이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도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

▶ (진술인) 위원님, 대표님께서 약간 취지를 오해하신 것 같음. 위원님께서 여쭙보신 것은 SPC가 없었다고 하면 대출금 투자부분과 상환우선주 투자부분이 똑같은 비율로만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여쭙보시는 것인데, 일단 그것은 가정이 어려운 것이 (주)◆◆◆◆◆◆◆◆를 믿고 투자를 제안해준 것이어서 어쨌든 투자금을 제안 받은 대로 모아오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위험감수능력이나 각자 판단에 따라서 투자비율을 결정한 것임. 만약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SPC가 없었으면 애초에 이 투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였음.

▶ (진술인)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임.

- (위원) 그런데 계획대로라면 상환우선주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40배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게 되고, 결국 상환우선주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상환우선주에 대한 투자의 전제조건이 대출이라는 말임.

▶ (진술인) 전제조건이라는 의미가 각자가 투자하는데 대여금이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주)△△△△이 연대보증을 서고 시행사가 요구한 금액에 맞춰서 발행이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음.

-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SPC를 설립해서 투자하신 것인지? SPC를 단순한 도관으로만 보기에에는 어렵다는 것임.

▶ (진술인) 저희들이 SPC를 법무법인 \$\$의 법률검토를 받았을 때 자금관리 용이라든가, 분배라든가,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SPC를 구도로 법률자문 받았음. 그때 당시에 그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SPC를 만든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음.

▶ (진술인) 결국 SPC가 없이도 만약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있는 투자자들의 트랜치(Tranche)구조, 일부는 Debt 투자도 하고 일부는 Equity 투자도 하고 또 일부는 Equity 투자만 하는 구조를 다 모을 수만 있었다면 좀 불

편하기는 했겠지만 할 수는 있었음. 그런데 보통 금융회사가 중간에 돈을 모아서, 사실 저희가 속된 말로 ‘돈통’이라고 하는데 돈통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이것을 각자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대상법인과 계약을 일일이 다 체결해야 되는 난점이 발생함.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중간에 펀드든지 SPC든지 돈을 모아서 통합관리하고 수취할 수 있는 SPC를 하나 설립하고 이 운영 자체를 금융회사가 맡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위원) 대표님과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투자자들이 각각 자기한테 맡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일부는 얻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음.

▶ (진술인) 맞음.

-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주)◆◆◆◆◆◆◆◆◆◆ 보통주 지분은 32.4%,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음. 대출은 3,412,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 대출이 나간 126억 원에서 비율을 계산해 보면 32.4%보다 낮음. 이것은 계산을 해 보면 나오는 것 같음. 제 질문은 간단함. 지금 진술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주)◆◆◆◆◆◆◆◆◆◆가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즉, 보통주 지분 그대로 대출 비율을 똑같이 부담한 투자자들에 비해서 위험부담을 더 했다는 것인지? 덜 했다는 것인지?

▶ (진술인) 우선, 제출 받으신 자료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시 그 투자의 대여금과 보통주 지분 비율은 동일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대여금과 보통주 투자를 같이 하

신 분이 계시고 보통주 투자만 하신 분이 계신 그런 사항임. 또 대여금과 보통주 투자를 둘 다 선택하신 분과 보통주 투자만 선택하신 분의 그 차이는,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상환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금리도 9.3%라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신 분께서는 대여금 투자까지 같이 진행한 것이고 보통주 투자하신 분은 보통주 투자로 인해서 얻게 되는 상환우선주에 의한 수익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분이 따로 계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임. 이것이 SPC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투자자들끼리 약정서를 맺었음. 그래서 그 약정서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것임. 그렇기 때문에 SPC가 굳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에게서는 당시에 이미 설정된 비율대로 하셨을 분들임. SPC 설립일이 2020년 2월5일이지만 약정서 체결은 1월말경에 이미 저희가 다 했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사실 보통주와 대여금 형태로 조달된 자금이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또 투자가 되어서 이것을 금액면에서 보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집금이나 분배나 이런 것들을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볼 소지도 있고, 유사하지는 않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투자목적회사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물론 이것이 펀드자금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나 자금원을 모아서 그렇게 트랜치(Tranche)를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 여럿이 돈을 모아서 투자수단(Vehicle)으로 PF가 쓰는 투자목적회사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정

된 투자목적회사가 아니더라도 투자수단(Vehicle)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당연히 여기를 통제해야 되니까 투자자 쪽에서 의결권을 기초(Base)로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는 특수관계인을 따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텐데, 그렇게 볼 소지는 없는지?

- (보고자) 일단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SPC 구성된 주주 내역을 보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지가 가능했던 측면이 있음. 그다음에 ◆◆◆◆◆◆◆◆ 투자자라고, 저희 설명자료를 보시면 처음에 (주)●●●●●●●● 주주로 참여를 했다가 탈퇴를 하고 직접 투자로 전환을 한 투자자가 있음. 시행사와 직접 거래를 한 투자자가 있었고, 이 구조는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된 측면이 다분히 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부동산PF 시행할 때 특수관계인인 (주)◆◆◆◆◆◆◆◆와 ▶▶▶이 대여금 부담에 비해 높은 상환우선주 배당을 받아서 이익을 받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위원) 그런데 특관자와 관계없는 다른 투자자들도 보통주 투자 비율 대비 대여금 비율은 또 높아서,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코너스톤자산운용(주), 저희는 금융사만 문제를 삼으니까 코너스톤자산운용(주)에서 보통주 대비 높게 대출을 해서 사실상 특관자들한테 어떤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지, 단순한 투자수단(Vehicle)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 (보고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공유하게 되면 처음에 자금을 제공하고 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됨. 그리고 통상은 대출

금을 많이 제공한 투자자들이 지분을 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제안 받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저희 진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하고 코너스톤자산운용(주)이 가장 많은 대출을 제공하고 있었음. SPC 대출 기준으로 (주)◆◆◆◆◆◆◆◆◆◆가 제일 많은 34억 원을 제공하고 있고 코너스톤자산운용(주)이 19억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상환우선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보통주 지분율을 보면 코너스톤자산운용(주)은 오히려 더 낮게 설계가 되어 있음.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금 제공에 대해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대출금 제공에 대한 배당을 더 높게 해 주는 일반적인 구조로 짜였다면 제 생각에 코너스톤자산운용(주)은 최소한 대출을 제공했던 15% 이상의 보통주를 배분받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 (위원) ★★과 ▼▼씨는 어떤 분인지? 혹시 ㉠㉠㉠씨와 관련이 있는 분들인지?
- (보고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분들과 직접 연결이 안 되어 확인을 못했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음.
-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에서 판단하실 때는 일부 투자자들은 출자에 대한 리스크만 부담하고 또 일부 투자자는 출자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익은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렇다면 아까 진술하신 회사 분들은 잘못 알고 있으신 것인지? 가장 최근에 보내 주신 자료의 (주)◆◆◆◆◆◆◆◆◆◆를 보면 보통주의 지분율은 32.4%인데 대출은 26%, 27%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

- (보고자) 맞음.

○ (위원) 그런데 아까 회사 분들은 이 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진술인이 제출한 14페이지짜리 자료 중 8페이지를 보면 보통주 지분을 본인들이 스스로 (주)◆◆◆◆◆◆◆◆◆◆ 지분이 32.4%라고 써놨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2.4%를 보통주 지분으로 표시해 놔고 9페이지를 보면 이 SPC가 조성한 자금 126억 7,500만 원에 대해서 각 주주가 공헌하고 있는 금액을 그대로 해 놓고 있음. 여기 보면 (주)◆◆◆◆◆◆◆◆◆◆는 총 126억 7,500만 원 중에 3,412,500,000원을 대출해 주고 있어서 이 대출비율을 계산해 보면 26.9%가 나옴.

- (보고자) 회사 측에서는 ▼▼▼, ★★★, ►►►씨를 감안하지 않고 나머지 분들이 동일하게 배분비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음.

○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주 비율이 지금은 더 높고, 그렇다면 (주)◆◆◆◆◆◆◆◆◆◆만 놓고 보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위험을 더 부담하는 것인지? 덜 부담하는 것인지?

한편으로 보면 보통주 금액보다 작지만 그보다는 대출을 덜 일으켰으니까 수익을 더 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후순위인 것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어서 어찌 보면 위험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 (보고자) 그런데 이 부분이 SPC 지분을 통해서 상환우선주의 배당을 받는 구조여서 사업 시행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자금환원의 경우 보통 액면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 진술인 주장대로 투자자들이 대출 비율 등에 대해서 차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음. 왜냐하면 초기에 내가 대출을 많이 부담하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대출 금리를 올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실제로 발견은 되고 있음. 하지만 이 SPC 건의 경우 보통주 지분율과 대출금액을 비교해 보면 이익을 보는 곳은 공교롭게도 (주)◆◆◆◆◆◆◆◆◆◆와 ▶▶▶ 등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고 저희가 볼 때 코너스톤자산운용(주)의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이나 회사에서 말씀하셨던 공헌도로 본다면 자산운용은 실제로는 (주)◆◆◆◆◆◆◆◆◆◆처럼 보통주 지분을 더 올려서 받아도 되는 구조였음. 하지만 ▶▶▶ 등에게 대출을 부담시키지 않고 보통주만 참여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자산운용은 손해를 보는 구조로 바뀌었음. 만약 이런 구조가 싫었다면 최상두 국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라는 회사가 있는데 진술인이 제출한 자료 14페이지 중 11페이지에 나와 있음. 처음에 SPC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가 이 회사는 SPC를 탈퇴하고 SPC 상환우선주에 참여하기로 했던 7,500만 원을 그대

로 참여하고 29억 원 정도의 대출을 시행사에게 직접 일시켰음. 아까 진술인이 이야기했듯이 법무법인 등에게 자문도 받아서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SPC 성립하기 전에 투자자 구성이 되어서 3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알았다고 했고,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특수관계인 대출에 대한 저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을 인지했던 상황이라면 ◆◆◆◆◆◆◆◆처럼 SPC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시행사에 대출을 해 주고 ○○○○의 상환우선주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었음.

- (보고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지금 저희가 올린 조치안은 2년 전에 제재심을 통과한 조치안임. 그때는 2020년말 기준으로 책정된 과징금이어서 2022년말 기준 자료로 다시 계산하면 부과과징금이 5,400만 원 더 늘어난 8억 4,200만원임. 그 점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음.
- (위원) 저는 지분구조의 변화 없이, 금액이 그대로 투영된 점은 수단(Vehicle)으로 쓰인 점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 또 지분구조와 대출금액의 차이가 좀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도 이렇게 논의하는 입장이어서 특수관계인은 맞지만 정말 투자를 위한 수단(Vehicle)처럼 인식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실제로 이 수단(Vehicle) 자체가 다른 고유의 비즈니스는 전혀 없고 오로지 이 투자만을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것을 다시 분배하는 기능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용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주 대비 대여금을 많이 주었다고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위험을 덜 부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그러니까 후순위로 들

어가는 것을 좀 적게 하고 선순위는 대출금으로 많이 갔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한 양정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것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또 다른 암시(sign)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동기나 결과나 다른 부분 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없을 까 하고, 저는 그 부분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 (보고자) 그런데 이것이 조정을 하더라도, 원래 18~19억 원 까지 나온 것으로 자본총액의 10% 넘는 부분을 빼면서 8억 원이 된 구조여서,

○ (위원) 그것으로 상한이 되어 있다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조정을 하더라도 아마 8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위원) 이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지?

- (보고자) 보통 대주주 신용공여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인 것 같음.

- (보고자) 실질차주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숨기기 위해서 형식적 차주를 중간에 내세워서 연계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어서, 저희가 실질차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후에 제재를 해 왔던 것임.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차주를 위해서 형식차주가 대주주 모습인 것은 분명한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려했던 것은 만약 이것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앞에 들어간 분이 동생 분이신데, 내 동생하고 내가 100% 가지고 있는 회사가 충분한 대출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지분율에 따라서 편익은, 그 지분율에 맞춘 편익을 가져간다는 것이, 혹시라도 이런 거래를 이용해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편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제를 인정해 주는 모습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실무검토 과정에서 좀 있었음.

○ (위원) 저도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하겠음.

○ (위원) 그렇다면 저도 뭐, 여담이기는 한데 (주)●●●●●●●●●●를 실제 다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한 것인지? 운용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한 것인지?

- (보고자) ㉠㉠㉠의 동생인 ▶▶▶이 하고 있음.

○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대세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음. 그런데 저는 대출을 덜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는 해석이 안 됨. 오히려 후순위를 더 가져감으로써 위험 부담을 더 했다고 보는 것이 저한테는 상식적으로 더 합리적인 해석으로 들리기는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술적으로 위반은 위반이니까 이것을 제재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감경을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19억 원 나오던 것이 7억 8,000억 원, 아까 조금 전 말씀처럼 자본금 때문에 8억 원이 넘어가게 되니까 감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는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적용을 75% 한 것인데, 그런 것을 조

금 더 조정할 수는 없을지, 동기를 '중'으로 하고 방법은 '상'으로 기간도 '중'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조정이 되어서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보다, 그렇게 해도 결국 자본금 상한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75%로 해서 19억 8,000만 원인데 중요도 계산할 때 다 '하'로 잡아도 그 밑으로는 안 내려 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렇게 해도 현재 부담이 13억 원 정도가,

- (위원) 그러면 결국 다시 자본금, 자본금 총계 10%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고의나 악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음. 직접 오셔서 진술도 하고 또 제재심 결과에 대해 실망한 것들이 진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됨. 고의로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했다는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되고, 위험부담을 더 했다, 그러니까 수익을 더 얻기 위한 구조라기보다는 몇몇 투자자들의 위험부담을 더 했다, 신승환도 대출을 전혀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후순위로 조금 들어가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됨.

- (보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부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상환우선주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쪽에 대해서 배팅을 한 것인데 그 금액은 총 4억 2,500만 원 밖에 안 됨. 반면에 대출금액은 126억 7,500만 원으로 위험부담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위원) 그러한 논리는 보통주와 대출을 일으킨 주체가 다르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음. 그러니까 나는 Equity

조금 들어가지만 이거 가지고 엄청난 영향력(Leverage)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을 엄청나게 부풀리겠다면 말이 확실하게 됨. 그런데 이 경우에는 Equity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대출을 일으킨 것인데, 그러니까 그 논리가 그 대로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음. 어떤 수익이 나든지 간에 일단은 선순위로 대출상황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내가 덜 받고 Equity를 가지겠다고 하면 위험을 더 부담했다고 해석이 된다고 봄.

-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음.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고 옳다고 생각함. 그래서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신용공여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 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SPC가 아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SPC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익분배라든지, 신용위험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통상적인 일들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SPC를 이용했다는 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지금 진술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자기 특수관계인인 SPC를 이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SPC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러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으로 이런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임. 그러니까 코너스톤자산운용(주)은 왜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인지, 우리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을 보는 취지를 어떻게 보면 많이 넘어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 그리고 아까 자산운용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정 자본금이나 자본총액의 10% 넘어서서 안 된다는

부분은, 저는 증선위나 이런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정상참작해서 감경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어떻게 보면 저는 중립자적인 위치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정상참작에 의한 감경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보고 또 다른 한 분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함.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했던 사안들을 심의지원팀과 함께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오늘은 일단 보류를 할테니까 다시 검토해 주셔서 다음 증선위 때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

- (보고자) 알겠음.

- (보고자)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투자중개업자 OEM펀드와 관련된 부분은 과태료 제척기간이 걸려 있음.

○ (위원장) 그 부분은 의결을 하겠음. 제22호와 제23호의 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OEM 펀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지?

○ (위원) 없음.

○ (위원장) 그러면 제22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3호 안건 중 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 5,000만 원은 원안대로 부과하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된 조치사항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음.

○ 제22호는 원안의결하고, 제23호는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제22호는 원안의결, 제23호는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217호(2023년) 『OOOOO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위원장) 2023년도 제217호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음. 회사는 일부 프로젝트에서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함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거나 충당부채를 과소계상 하였으며, 종속 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검토 절차를 소홀히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등 재무제표를 왜곡하여 작성하였음. 또한, 감사인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왜곡하여 작성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해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수정하겠음. 먼저 회사에 대해 첫째, 종속회사의 손실 발생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회사가 의도적으로 손실을 회피하거나 종속 회사투자주식 손상차손을 미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회계처리기준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였음. 둘째, 회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프로젝트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추가공사예정원가를 1년 지연 인식한 기간귀속 오류로서, ‘19년 재무제표 발행 당시에는 추가공사

예정원가의 정확한 반영 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 일부 인정되고, 위반금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동기를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판단하였음. 셋째, 회사의 감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관련하여, 감리방해 지적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당한 소명과정의 일부로 보아 이를 허위 소명을 통한 고의적 감리방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감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회사 측이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았던 점을 일부 인정하여 감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하지 않되, 회사 및 대표이사 ㉠㉠㉠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는 원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음.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과징금을 ‘161억4천1백만원’으로, 前대표이사 ☆☆☆의 외부감사법 위반 과징금을 ‘10억1천만원’으로, 대표이사 ★★의 자본시장법 위반 과징금을 ‘2천만원’으로, 대표이사 ㉠㉠㉠의 자본시장법 위반 과징금을 ‘1천2백만원’으로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또한, 회사의 주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위반동기가 ‘고의’에서 ‘중과실’로 수정된 만큼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다음,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동기 수정 및 감사인의 감사절차 소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수준을 원안의 ‘중과실 II단계’에서 ‘중과실 V단계’로 수정하고 과징금은 원안의 20억5천5백만원에서 ‘14억3천8백만원’으로 감경하겠음. 또한, 소속공인회계사 6인에 대해서도 감사인과 동일한 사유로 조치수준을 수정하여 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221호(2023년) 『(주)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 (위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허위자료 외에 감리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조작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것인지?

- (보고자) 본 건 같은 경우 감리 진행 중에 또 자료를 변조해서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16시 01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의결안건 제24호 『(주)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매출 등 허위계상 및 외부감사방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당초 국세청은 이번에 금감원에서 지적한 것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검찰고발했지만 검찰수사결과 실제로 중고 휴대폰이 해외에 수출되었고 거래업체에 실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계산서 발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1년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 이처럼 무혐의 처분을 하였는데 같은 사안을 또 다시 검찰에 보내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람. 또한 당사는 2018년 한 차례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고 휴대폰 매매사업은 現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변경되기 전에 그것도 1년 남짓 영위했다가 지금은 해당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2018년에 있었던 일로 또 다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면 당사로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임. 본 건의 경우 금액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위반사항에 해당하고, 또 다시 거래가 정지될 경우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며 검찰통보 대신 업무정보 송부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제재효과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통보 조치는 과도하다고 사료됨. 검찰통보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각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당사는 기존 발행된 전환사채기한이익이 상실됨으로써 당장 100억 원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램. 당사는 이미 대주주 및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중고 휴대폰 매매사업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도 없음. 또한, 이미 해당 사업은 중단하였으므로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

○ (위원) 전환사채 기한이익이 상실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환사채 투자자가 누구인지?

▶ (진술인) 전환사채 투자자는 저희와 사업적인 관계에 있는 일반투자자들임.

○ (위원) 2017년도의 영업이익이 8억 원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휴대폰 사업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 (진술인) 그중 휴대폰 사업으로 나왔던 이익은 1,3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음.

○ (위원) 2019년 10월에 최대주주 경영진이 교체되었다고 했는데 이전 최대주주가 현재도 일정부분이라도 지분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경영진 내지는 동기임원이 전부 교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현재는 전부 교체가 맞고 前경영진들은 경영참여나 주주로 있는 사항이 없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희들의 소청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겠음. 첫째, 과징금 산정하는 위반행위 중요도 관련하여, 회사가 주권상장 코스닥법인이라는 하나 당시에 주권 거래 매매정지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감점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고점만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함. 둘째, 저희 당사자들 위반동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기타 불법적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살펴주셨으면 함. 그리고 비상장회사를 위주로 감사해온 본 법인의 특성상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아닌 국제회계기준에 좀 서투른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개인에 대한 소청사항임. 저희 회계법인은 소형회계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도 아니어서 본 상장사 감사 수행 다음 해부터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감사대상회사가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회사가 거래가 정지될 경우에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사채상환 의무가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그러면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 (보고자) 지금 공시사항을 보면 저번에 CB발행했다가 중간에 상환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17시 17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 (위원장) 회사측 과징금의 경우 최대주주 경영진 변경 부분 관련하여 증선위 선례를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증선위 때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주권거래 매매정지 상태를 참작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다음 증선위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음. 제24호 안건은 보류하겠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5호 『(주)○○○○○○○○○○○○○○○○(舊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6호 『○○○○○○○○(주)(舊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의결안건 제25호 관련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희가 합병을 한 이후부터는 착실하게 준법정신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함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이를 감안하여 감사인 지정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합병 당시 회사 자산 총액이 합병 후 회사에서 차지한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 (진술인) 합병 당시 회사 자산이 한 2배 정도 많았음.

▷ 의결안건 제25호 진술인이 퇴장함.

▷ 의결안건 제26호 관련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회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회계처리 위반은 모회사가 자체적인 경영진단 과정에서 발견을 하고 외부전문기관에 회계부정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및 시정조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채무제표를 자진정정한 부분을 참작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반 채무제표를 이용한 채무증권발행으로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셔서 과징금이 가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그런데 이 사채를 발행할 때 모회사의 채무보증을 근거로 해서 발행되었고 1년 뒤에 저희가 정정된 채무제표를 가지고 회사채 신용평정을 다시 하였을 때에도 평가등급은 변함이 없었음. 현재 회사채는 정상적으로 상황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 사채 가격이 떨어져서 투자

자분들이 손해를 보셨다면 투자자들이 저희 회사에 사채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작 부탁드립니다. 위반사실 식별 당시 CFO는 바로 교체되었고 그 당시 지배주주는 그해 10월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등 당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련되어 있었던 경영진은 모두 교체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작년 2월에 위반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합병 하면서 증가된 사업비중은 20%가 채 되지 않음. 그런데 위반행위를 저지른 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해 저희 회사가 과징금과 감사인지정에 대해 전부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으나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음을 참작 부탁드립니다.

▷ 의결안건 제26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저는 감리위 의견 대로 30% 정도 감경하는 의견에 동의함.
- (위원) 저도 감리위 심의(안) 30%에 동의함.
- (위원장) 제25호 및 제26호 안건은 감리위 심의의견대로 지적사항 및 동기는 원안대로 하되, 회사 및 前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는 회사가 합병 후 소멸된 상태로서,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통보의 실효성이 없고 前담당임원은 이전 검찰조사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업무정보 송부로 대체하겠

음. 아울러 회사의 내부경영진단 및 포렌식조사 실시 등 자
진정정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30%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각각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수정의결함

□ 보고안건 제2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결과 보고』을 상정하고 서면보고 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27호 『○○○○○○○○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보도자료를 내거나 투자위험 경고 등으로 고지할 계
획이 있는지?

- (보고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있어서 금융위에서
안건이 확정되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건을 하고, 투자자들
에게도 주의사항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임.

- (위원) 피조치자 진술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국내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실질적인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회사는 미국의 비상장법인이지만 한국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모집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었고 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것임.
- (위원) 미국 내 환수재산을 반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
- (보고자) 지금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에서 기소해서 자산을 몰수했음. 그래서 지금 현재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펀드 내에 몰수한 자금을 넣어놓은 상태이고 저희 쪽에서 투자자 관련한 자료를 SEC에 통보하면 SEC가 그 자금을 피해투자자들에게 환급해 줄 예정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8호 『(주)삼광랩트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9호 『(주)상지카일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30호 『케이에이치필룩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4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